

광주 체감경기 10년 만에 '최저'

상공회의소, 기업경기 전망지수 10년 만에 가장 낮은 '64'

"경제 지난해比 호전될 것" 12.9% 그쳐...채용시장도 '꽁꽁'

새해를 맞은 광주지역 제조업체들은 업황 불황과 인건비 상승 부담 등으로 올해 경제가 지난해 보다 더 위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1분기(1~3월) 신규채용 계획도 '없다·미정'인 기업이 전체 응답기업의 71.5%를 차지할 정도로 채용 시장도 꽁꽁 얼어붙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상공회의소는 15일 지역 제조업체 140곳을 대상으로 올해 1분기 제조업 기업경기 전망지수를 조사한 결과, 기업경기 실시지수(BIS) 전망치가 기준치(100) 이하인 '64'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전분기보다

16포인트 하락한데 이어 지난 2009년부터 10년간 조사한 기업경기 전망지수로는 가장 낮은 수치로 확인됐다.

BIS는 기업들의 현상 체감경기를 수치화한 것으로, 기준치(100) 미만이면 향후 경기가 전분기보다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다는 의미다.

체감경기 '악화'는 자동차·가전·타이어 등 주력산업의 업황 불안 지속과 산업 활동 비수기로 인한 경기 위축 우려,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경영부담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경제전망에 대해서는 '지난

해보다 호전될 것'으로 전망한 기업은 12.9%(18개사)인 반면, '악화' 또는 '매우 악화'될 것으로 보는 기업은 44.3%(62개사)로 나타나 올해도 경제 흐름이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는 의견이 더 많았다.

사업투자 방향도 경기 불확실성 증대로 기업 10곳 중 8곳 이상이 보수적으로 수립했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는 '경기 불확실성 증대(39.6%)'가 가장 많았고, 기존 시장의 경쟁 과다(22.3%), 자금조달 어려움·고용노동환경 변화(각각 16.3%)순으로 조사됐다.

지역 제조업체들은 올해 경영에 영향을 미칠 국내 리스크로 '내수

침체 장기화(42.4%)'와 '최저임금 등 고용노동환경 변화(37.6%)'를 가장 많이 지적했다.

대의 리스크로는 '통상 분쟁 등 보호무역주의(36.3%)'와 '중국경제 성장세 둔화(30.8%)'라고 답해 미국 정부의 자동차에 대한 고율관세 실행 불안감과 중국경제 둔화 리스크를 가장 경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기업들의 수주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 등 고용노동정책으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체감경기가 더 움츠러들고 있다"면서 "정부가 내수 활성화와 고용노동정책 속도조절, 미국의 수입산 자동차 관세 부과 리스크 해소 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지역 제조업체들의 경영여건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돌파구를 열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조인호 기자

연말정산 주요 일정

회사→홈택스	1월 3일~	기초자료 등록
홈택스→근로자	1월 15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
근로자→홈택스	1월 15일~17일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
홈택스→근로자	1월 18일~	편리한 연말정산 및 모바일 서비스 개통
홈택스→근로자	1월 20일~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최종 제공
회사→홈택스	2월 1일~3월 11일	근로소득기입명세서 전자제출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공제항목

- 1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 확대
연령 29세 → 34세 감면율 70 → 90% 적용기간 3년 → 5년
- 2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7월 이후 도서공연번호 지출한 신용카드 금액 소득공제율 30% 적용
- 3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한도 폐지 (700만원 → 전액공제)
- 4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 월세 세액공제율 10% → 12%
- 5 보험료세액공제에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추가(3억원 이하)
- 6 생산직근로자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기준 150만원 이하 → 190만원 이하
공제대상에 청소년경비조리음식 서비스직 등 대상직종 추가

자료:국세청

연말정산, 올해부터 달라지는 점은

연말정산이 15일 시작했다. 직장인들은 이날 오전 8시부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첫날인 15일과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 개시일인 18일,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최종 제공일 다음날인 21일, 부가세 신고 마감일인 25일엔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면 좋다. 특히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공제항목들이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먼저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지난해 7월부터 도서·공연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썼을 경우 공제율 30%가 적용된다.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엔 최대 10만원까지 추가 공제된다. 다만 사용처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인 한국문화정보원에 사전등록된 도서·공연사업자여야 한다.

소득세가 감면되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 연령이 기존 29세에서 34세로 확대됐다. 감면율도 70%에서 90%까지 확대됐다. 감면 적용기간 역시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생산직근로자 초과수당 비과세액의 경우 월정액 급여 기준이 190만원으로 늘어났다. 적용 대상 직종에는 청소년·경비 관련 단순 노동자 종사자, 소규모 사업자에게 고용된 조리·음식 서비스직 등이 추가됐다.

주거 부문에선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자는 제외)의 월세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된다.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서 서식의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와 계약기간 등 내역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보험료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보험에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엔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가 추가된다.

작년 韓서 일한 외국인 근로자

오는 2월말까지 연말정산해야

2018년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있었던 외국인 근로자는 2월28일까지 연말정산을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2018년 중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라면 누구나 국적과 체류 기간에 관계없이 2월28일까지 연말정산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방법은 내국인 근로자와 같다. 외국인 근로자는 소득공제

증명자료를 준비해 회사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기간은 20일부터 2월28일까지다. 이후 회사는 3월1일까지 국세청에 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일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은 외국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 추진, 광주송정역 연계 개발 시너지 기대

광주송정역 주변 64만㎡ 투자선도지구 개발사업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을 빛그린산 단으로 이전하는 절차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송정역과 연계한 금호타이어 부지 개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16일 광주시와 금호타이어, 미래에셋대우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과 부지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용섭 광주시장, 김삼호 광산구청장, 전대진 금호타이어 부사장 등이 참석한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부지는 39만6694㎡(12만평) 규모로 광주송정역과 연계해 개발하면 대규모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광주의 관문인 광주송정역 일대를 개발하는 지역경제거점형 KTX

투자선도지구 개발사업이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광주시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23년까지 5830억원을 투입해 광주송정역 주변 64만㎡를 정비하고 개발한다.

광주시에 LH와 함께 사업성을 분석해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부지를 광주송정역 투자선도지구 포함시키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방침이다.

금호타이어는 광주시와 노사 3자간 지속발전 TF팀 구성과 함께 개발 과정에서 용도변경 및 행정조치 협의를 광주시에 요청했다.

이외는 별도로 광산구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광주송정역세권



연계 개발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다. 광산구는 현실성 있는 다양한 개발방식이 포함된 역세권 개발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는 2월 토론회를 거쳐 3월께 연구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송정역 투

자선도지구 개발사업에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부지를 포함시키는 것은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필요로 한다"며 "토지가격 상승과 개발방법 등 다양한 여건을 놓고 사업타당성을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형백 기자

국민연금 1월부터 월 5690원 더 받는다...물가인상 조기반영

이달부터 국민연금 수급자 452만 명이 물가인상이 반영돼 월 5690원 오른 국민연금을 받는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국민연금액 인상시기를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15일 시행된

다고 밝혔다.

연금은 실질가치 보전을 위해 매년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연금액을 인상 지급한다. 한때 매년 1월 반영되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과 달리 국민연금은 3개월 뒤인 4월어야 보전이 이뤄

져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보전시기가 앞당겨져 국민연금 수급자 452만여명은 이달부터 기본연금액이 지난해 물가변동률 1.7%를 반영, 월 평균 5690원 오른다. 종전 제도와 비교하면 1~3월분에도 인

상률이 적용되므로 올해 1인당 평균 1만7070원(5690원×3개월)을 더 받는 셈이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부양가족연금에도 같은 기준으로 배우자는 3850원 인상된 연금 26만720원, 자녀·부도는 2660원 오른 17만3770원을 수령할 예정이다.

올해 1~3월 신규수급자 10만여 명도 법 개정 효과를 본다.



임산부 배려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